

##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강원택

## 서론

정치적 정체성은 한 정치공동체 속의 ‘우리’ (we)는 누구이고, 외부의 ‘그들’ (they)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하는 기준일 것이다. 근대 이래 국민국가는 이와 같은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 개인 입장에서는 국민국가 이외에도 여러 층의 정치적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다. 특히 유럽처럼 지역통합이 심화되어 개별 국민국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 기구가 확립되는 경우라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이라는 국민국가의 정체성 이외에도 유럽인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국가 하위 단위인 특정 지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스코틀랜드인이자 영국인이며 동시에 유럽인이라는 복수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층적 정체성은 때때로 서로 충돌하기도 하며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층적 정체성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구한 역사동안 ‘단일민족’으로 지내왔지만,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해 ‘한 민족 한 국가’라고 하는 민족주의의 기본 원리를 구현하지 못한 채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상호 구분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민족정체성이 남북한을 포함하는 혈연적 의미가 강하다면 국민 정체성은 정체(政

體)의 상이함을 포함하는 정치적 의미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두 정체성은 사실 구분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층적인 형태로 공존하고 있으며 종종 이 두 가지 정체성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개별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한민족이라는 보다 확대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은 사실 '같지만 다른' 두 개의 정체성(전재호 2006, 251)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남북 간의 분단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상황이므로 통일을 통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결합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최종 단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남북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한 자체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내부 구성원의 다양성도 매우 커졌다. 따라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종적인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생겨나게 되었다. 5년 전 동아시아연구원 국민 정체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이런 변화의 경향을 '대한민국 민족주의'라고 부른 바 있다(강원택 2006).

이 글은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충돌과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 속의 '우리'는 누구이며, 북한동포, 해외교포 그리고 조선족은 '우리'인지, 아니라면 '그들'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5년 전 조사 분석을 통해 제시한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경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변화했다면 그것을 추동한 원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정치공동체에서 ‘그들’과 다른 ‘우리’의 범주를 규정짓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공통으로 지녀야만 하는 중요한 특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질이 필요할까? [표 1]에는 오늘날 한국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에 대한 응답을 2005년과 2010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단위 : %)**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	조사 연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2005	81.9	17.7	0.4
	2010	87.7	12.2	0.1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	2005	88.2	11.1	0.7
	2010	89.4	10.5	0.1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2005	64.6	34.7	0.7
	2010	78.2	21.5	0.3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2005	87.0	12.6	0.4
	2010	87.8	12.2	0.0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2005	77.5	20.6	1.9
	2010	87.3	12.4	0.3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	2005	80.9	18.3	0.8
	2010	84.1	15.4	0.5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2005	80.9	18.3	0.8
	2010	85.9	14.0	0.1

전반적으로 두 조사의 응답 패턴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가 확인된다. 무엇보다 5년 전에 비해서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예외 없이 높아졌다. 2005년에는 각 항목별로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최저 64.6퍼센트(국내 거주)부터 88.2퍼센트(국적 유지)의 분포였는데, 2010년 조사에서는 78.2퍼센트(국내 거주)에서 89.4퍼센트(국적 유지)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일곱 개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의 평균은 2005년 80.1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85.8퍼센트로 커졌다. 이전에 비해 ‘진정한 한국인’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 비율의 순위별로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적 유지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 사용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는 5년 전 조사와 동일한 순위였다. 5년 전 조사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부분은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과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다. 전자의 경우 중요성에 대한 응답이 13.6퍼센트나 높아졌고 후자 역시 9.8퍼센트 상승해서 다른 항목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하고 그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응답은 혈연적 정체성보다 정치적 공동체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응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민족정체성보다는 국가정체성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보다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 1]에서 본 변화는 ‘진정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정체성의 자격 요건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비(非)한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진입장벽(threshold)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을 묻는다는 것은 이미 그 질문 속에 ‘한국인’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다소 이질적인 구성원이

[표 2] 한국 거주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의 변화 추이(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체류 외국인 <sup>a</sup>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외국 국적 동포	184,822	194,413	267,436	365,732	421,155	430,104
결혼 이민자	57,069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87

\* 주. a.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 모두 포함한 수.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 100-101).

많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난 5년 간 과연 한국 사회의 구성은 얼마나 다양해졌을까?

[표 2]를 보면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수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총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4년 75만 명 수준에서 2009년에는 거의 117만 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 역시 2004년 18만 명 정도에서 2009년이 되면 대략 2.5배 늘어난 43만 명이 되었다. 결혼 이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역시 2004년 5만 7천 명 수준에서 2009년이 되면 12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이 매우 다양해진 것이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처럼 외향은 동일하지만 국적이 다른 경우도 늘어났고 결혼 이민자들처럼 외향은 다르지만 국적이 같은 이들도 증가한 것이다. [표 2]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탈북자의 수도 늘어났다. 탈북자의 수는 2006년 2,018명, 2007년 2,544명, 2008년 2,809명, 2009년 2,927명, 2010년 10월 10일 현재 1,979명이며 모두 합친 수는 이미 2만 명을 넘어섰다(〈조선일보〉 2010/11/05)<sup>1)</sup>. 이와 같은 구성원의 다양화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까지 갖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표 1]에서 본 것과 같이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방어막이 높아진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표 3]에는 탈북자, 외국 국적 외국 거주 동포, 외국 국적 국내 거주 동포,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국제결혼 가정 자녀, 조선족,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 등 여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5/201011150039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5/2010111500396.html)(검색일 : 2011.2.20).

**[표 3] 각 집단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단위 : %)**

구분	완전 남이다	남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자	5.5	23.2	44.2	27.2
외국 국적으로 외 국거주 동포	10.0	43.9	31.9	14.2
외국 국적으로 국 내거주 동포	8.1	46.6	36.0	9.2
이주 노동자	13.1	48.3	31.1	7.5
결혼 이민자	5.5	24.0	45.7	24.8
국제결혼 가정 자녀	2.5	16.3	45.2	36.0
조선족	5.8	33.9	42.3	18.0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가진 이중 국적자	9.2	47.0	32.7	11.1

\* 주, a.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 모두 포함한 수.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 100-101).

덥 종류의 집단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이 결과는 ‘한국인들’이 각 집단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심리적 거리감은 “완전 남이다”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다”까지 네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여덟 개의 집단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다”와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는 두 응답을 합한 비율에 따라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 집단이 38.6퍼센트로 8개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이주 노동자들이 인종적 문화적 이질감이 큰 편이고 대체로 단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응답이 38.6퍼센트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한민국 정치 공동체의 일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두 번째로 큰 집단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로 43.8퍼센트만이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가 45.2퍼센트, 그리고 '외국 국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가 46.1퍼센트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 패턴은 무척 흥미롭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주 노동자 집단과는 달리 모두 혈연적 동질성을 가진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는 응답의 비율은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혈연적으로 동질적이라고 해도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데 거부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의가 혈연적인 것보다 국적과 같은 '정치 공동체의 공식적 소속 여부'가 보다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중 국적자에 대한 낮은 응답률이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중 국적은 한민족으로서의 혈연적 동질성은 갖고 있지만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곳이 반드시 대한민국일 필요는 없는 이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중 국적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큰 것은 앞의 [표 1]에서 본 대로,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하고 그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조선족에 대해서는 60.3퍼센트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들이 실제로 중국 국적인 경우가 대다수임을 감안하면 다른 외국 국적 집단과 비교할 때 이들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동포라고 하더라도 이중 국적자나 외국 국적 소유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인데 비해 조선족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방과 분단 과정에서 서로 단절되었던 역사

적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국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 가정 자녀, 결혼 이민자, 탈북자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그에 가깝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결과이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이며 또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81.2퍼센트가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응답을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확정적 견해는 36퍼센트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모두 70.5퍼센트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응답했는데, 여기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정적 견해는 24.8퍼센트에 불과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나 결혼 이민자 모두 '완전할 일원'으로 보기보다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졌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편, 탈북자에 대해서는 모두 71.4퍼센트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사실 혈연적 동질성을 갖고 있고 말투를 제외하면 외형적인 차이를 찾기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북한 체제가 싫어 남쪽으로 탈출해 온 탈북자들은 단지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큰 차이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7.2퍼센트로 나타난 것은 다소 놀랄 정도로 낮은 응답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혈연보다 국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정체성보다는 국가정체성이 보다 중시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 가정 자녀,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중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 간의 미묘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할 때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아마



[표 4] 탈북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단위: %)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북한출신 남한 사람	재외동포	기타/모름/무응답
19-29	43.5	7.0	46.5	2.5	0.5
30대	42.6	9.2	44.9	2.0	1.3
40대	36.5	12.4	49.8	0.5	0.9
50대	42.3	12.7	44.4	0.0	0.5
60대 이상	50.8	14.9	32.8	1.0	0.5
전체	42.9	11.2	43.9	1.2	0.8

도 탈북자일 것이다. 두 정체성이 충돌하는 지점에 탈북자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표 4]는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탈북자는 ‘북한 출신 남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43.9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 수식어 없이 그냥 일반적인 ‘남한 사람’이라는 응답 11.2퍼센트를 합치면 모두 55.1퍼센트가 탈북자들을 남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북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응답도 42.9퍼센트로 나타났다. ‘북한 사람’이라는 응답은 그들이 탈북해서 남한 사회가 같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배타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42.9퍼센트의 응답률은 사실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응답 패턴은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거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온전한 남한 사회의 ‘내부자’로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탈북자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이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40대이다. 다른 세대 집단에 비해 탈북자에 대해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모두 62.2퍼센트가 탈북자가 남한 사람이거나 북한 출신 남한 사람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60대 이상은 탈북자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데 47.7퍼센트만이 그들을 '남한 사람'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절반이 넘는 50.8퍼센트가 탈북자를 '북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놀랍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과 다르다는 상이한 정체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즉 한민족 혹은 한국인이라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남한 사람'이라는 별개의 정체성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남북한을 모두 포괄하는 민족정체성보다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국가정체성이 보다 강화되는 경향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특성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본단의 의미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관계를 분석했다.

[표 5]와 [표 6]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5]에서는 남북한을 별개의 독립국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탈북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을 별개의 독립국가라고 보는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집단과 비교할 때, 탈북자들을 '북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북한은 별개의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집단에서는 탈북자가 수식어 없는 완전한 '남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18.5퍼센트로 거의 두 배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 출신 남한 사람'이라는 응답도 5퍼센트 가량 높았다. 즉 북한을 대한민국과 상이한 별개의 정치 공동체로 간주하는 이들은 탈북자들을 '북한 사람'이라는 상이한 정체성을 갖는

**[표 5] 남북한의 독립국가 여부와 탈북자에 대한 인식**

남북한 : 별개의 독립국가	탈북자에 대한 인식				합계 (n)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북한 출신 남한 사람	기타	
그렇다	43.8	9.4	44.8	2.0	100.0(819)
아니다	39.5	18.5	40.0	2.0	100.0(200)

카이제곱 검정  $\chi^2 = 13.45$   $p < 0.01$

이들로 간주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6]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매우 흥미롭고 일관된 패턴이 확인된다.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보면 볼수록 탈북자를 ‘북한 사람’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절반이 넘는 52.0퍼센트가 탈북자를 ‘북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또한 “통일을 서둘 필요 없다”는 집단에서도 그 비율은 47.3퍼센트에 달했다. 이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는 탈북자를 ‘남한 사람’ 혹은 ‘북한 출신 남한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비율이 높았다. 통일을 “빨리 해야 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탈북자가 수식어 없는 완전한 ‘남한 사람’이라는 응답은 24.3퍼센트로 다른 집단과 뚜렷이 대비되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건 보며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한 집단에서는 ‘남한 사람’ 혹은 ‘북한 출신 남한 사람’을 합친 비율이 60.3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즉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탈북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표 5]와 [표 6]의 차이는 이제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범위를 대한민국, 곧 남한 지역에 둘 것인가 혹은 남북을 모두 포함하는 한반도에 둘 것인가에 따라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과 구분되는 남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분리된 소속감, 정체성이 혈연적으로 동질

[표 6] 통일의 필요성과 탈북자에 대한 인식

통일 필요성	탈북자에 대한 인식				합계 (n)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북한 출신 남한 사람	기타	
빨리 해야 한다	41.1	24.3	33.6	0.9	100.0(107)
여건 보며 속도 조절해야	37.5	11.9	48.4	2.1	100.0(477)
통일 서두를 필요 없다	47.3	7.9	43.9	0.8	100.0(239)
굳이 통일 필요 없다	52.0	6.1	38.3	3.6	100.0(196)

카이제곱 검정  $\chi^2 = 42.54$   $p < 0.00$

적이지만 정치적 소속이 달랐던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모두 '대한민국 민족주의' 라고 하는 남한만의 정치적 정체성, 국가정체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한만의 분리된 정체성의 등장을 고려해 볼 때, 남한 사람들의 영토 인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영토가 남한 지역에 그치는 것인지, 남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지역인지, 혹은 한반도와 만주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인지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응답을 정리했다. [표 7]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2005년과 2010년 조사를 비교해서 제시한 것이다. 2005년에 비해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영토가 남한 지역에 국한한다는 응답이 전 연령층에 모두 높아졌다. 비율의 증가도 매우 크다. 대체로 20퍼센트 이상 높아졌는데 50대 응답자들의 경우 무려 35퍼센트나 그 비율이 증대되었다. 한편 이러한 응답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욱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20대의 경우에는 57.4퍼센트가 우리의 영토는 남한에 국한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영토가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라는 응답은 줄어들었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포함한다는 응답은 10

[표 7] 연령별 영토 인식(단위: %)

연령	조사 시기	영토 인식			계
		남한 지역	한반도 지역	한반도+만주	
20대	2005	36.7	39.9	23.4	100.0
	2010	57.4	30.3	12.2	100.0
30대	2005	30.0	40.8	29.2	100.0
	2010	48.1	37.6	14.3	100.0
40대	2005	21.4	50.0	28.6	100.0
	2010	47.1	34.1	18.8	100.0
50대	2005	13.9	59.7	26.4	100.0
	2010	46.9	39.4	13.8	100.0
60대 이상	2005	24.0	56.7	19.3	100.0
	2010	43.5	41.9	14.5	100.0

퍼센트 대에 그쳤다.

5년 사이에 이러한 커다란 인식의 변화는 무척 흥미롭다. 이런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개입되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제기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정치적 소속감 혹은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가 미친 영향이다. 즉 우리의 영토가 남한에 국한된다는 응답의 증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정체성 혹은 소속감의 강화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치적 소속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토 인식의 패턴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8]에서는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 가까움을 느낀다고 말한 이들 가운데,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의 차이에 따른 영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과 한민족이라는 사실 모두 가까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한민족이라는 데는 가까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우리의 영토가 남한에 국한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영토가 한반도라는 응답은 36퍼센트 내외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한민족을 강조한 집단에서는 한반도와 만주까지 포함한다는 응답이, 대한민국에만 정체성을 갖는 집단에 비해 거의 두 배 높게 나왔다. 즉 영토 인식에서도 북한을 포함하는 ‘한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의 분리된 정체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남한 외부에 존재하는 한민족, 다시 말해 일

[표 8] 정치적 소속감에 따른 영토 인식(단위 : %)

	남한	한반도	한반도와 만주	전체 (n)
한국O 한민족O	45.7	36.5	17.8	100.0(606)
한국O 한민족×	54.4	35.9	9.7	100.0(195)
카이제곱 검정 $\chi^2 = 8.39$ $p < 0.05$				

\* 주. 대한민국 O, 한민족 O :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이라는 데 가깝게 느낌.

대한민국 O, 한민족 ×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는 가깝게 느끼나, 한민족에는 가깝게 느끼지 않음.

반적으로 한민족으로 통칭되는 해외 거주 동포에 대해서는 과연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9]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에 대해 정치적 소속감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거주 지역별로 나눠 살펴본 것이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표 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재미동포/재일동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재미동포/재일동포에 대해서는 2005년, 2010년 두 조사에서 모두 큰 차이 없이 대체로 70퍼센트 이상 비율로 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 일원이라는 우호적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다른 동포 집단에 대해서는 2005년과 비교할 때 오히려 ‘남’이라는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중국 조선족은 26.4퍼센트에서 39.1퍼센트로, 러시아 고려인은 32.8퍼센트에서 50.3퍼센트로 “남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가장 주목할 점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식의 급격한 변화이다. 2005년 조사 때 23.1퍼센트만이 북한 동포를 “남이다”라고 응답했는데 2010년 조사에서 이 비율은 44.4퍼센트로 21.3퍼센트나 높아졌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이질감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앞의 [표 4]에서 제시된 대로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북한과 구분되는 남한만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여기서도 확인되고 있다. 북한동포를 포함하는 민족정체성보다 대한민국만의 국가정체성이 보다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표 10]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앞에서 본 대로, 남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별도의 정체성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한민족으로 정체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각 지역별 동포에 대한 국가정체성의 거리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재미동포와 재일동포는 다른 동포들에 비해서 국가정체성의 거리감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응답의 비율도 두 집단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해외 거주 동포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조선족, 고려인, 북한 동포 세 집단에서 모두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는데, 한민족이라는 일체감을 갖는 집단에 비해 그런 일체감을 가지 않은 집단에서 이들 교포들에 대한 국가정체성의 거리감이 컸다. 즉 한민족이기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별도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의 범위를 ‘한민족’ 이거나 ‘북한 동포’를 포함하는 남북한으로 간주하지 않고 보다 협소한 ‘남한’의 구성원만으로 간주하려는 태도가 여기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재미동포, 재일동포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흥미롭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과 유사한 정치, 경제체제를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국가에 거주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와 문화적인 유사성이 크다는 점도 또 다른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표 1], [표 3] 그리고 [표 4]에서 본대로,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에 대한 태도가 그다지 개방적이거나 수용적이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 9]나 [표 10]에서 재미, 재일 동포에 대한 국가정체성의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분석으로 결과를 두고 볼 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한민족 혹은 남북한 공동체와 같은 혈연적 의미가 강조되는 민족정체성보다는 남한 지역만으로 국한되는 국가정체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해외 거주 동포에 대한 국가정체성의 거리감(단위 : %)

구분	조사 연도	재미동포	재일동포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북한 동포
남이다	2005	28.8	28.3	26.4	32.8	23.1
	2010	26.0	26.3	39.1	50.3	44.4
대한민국 국민이다	2005	71.2	71.7	73.6	67.2	76.9
	2010	74.0	73.7	60.9	49.7	55.6

\* 주. 남이다 (완전 남이다, 남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모름/무응답은 제외.

[표 10] 정치적 정체성에 따른 해외 거주 동포에 대한 정치적 소속감의 친근도 차이

구분	자신의 정체성	평균*	t-test
미국 동포	대한민국 O, 한민족 O	3.00	p=0.29
	대한민국 O, 한민족 ×	2.94	
일본 동포	대한민국 O, 한민족 O	2.98	p=0.12
	대한민국 O, 한민족 ×	2.89	
중국 조선족	대한민국 O, 한민족 O	2.80	p<0.01
	대한민국 O, 한민족 ×	2.60	
러시아 고려인	대한민국 O, 한민족 O	2.63	p<0.01
	대한민국 O, 한민족 ×	2.38	
북한 동포	대한민국 O, 한민족 O	2.69	p<0.01
	대한민국 O, 한민족 ×	2.46	

\* 주. “완전히 아니다-1”, “남에 가깝다-2”,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3”, “대한민국 국민이다-4”의 평균임. 수치가 높을수록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표 2]에서 본 것처럼 조선족, 탈북자,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등 남한 사회의 구성이 다양해졌고 그로 인해 혈연적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혹은 3대 세습이나 기아 사태 등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점보다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증대된 결과일 수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증대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심, 일체감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북한 등 외부의 혈연공동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정체성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표 11]은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2005년과 2010년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한민족의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2005년 52.9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62.3퍼센트로 거의 10퍼센트 가량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끄럽다”는 응답은 2005년 6.7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3.0퍼센트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지난 5년 사



이에 적지 않게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가 언제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했다. [표 12]는 이에 대한 2005년과 2010년의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조사에서 공히 역사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는 역시 고구려였다. 고구려가 역사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응답은 2005년에는 33.7퍼센트였지만 2010년 조사에는 30.4퍼센트로 대략 3퍼센트 정도 낮아졌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두 조사 모두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비율은 2005년의 24.6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29.2퍼센트로 대략 5퍼센트 정도 늘어났다. 2005년 조사에서 고구려와 대한민국 간의 응답 비율의 차이는 9퍼센트 정도였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1퍼센트 정도의 차이만을 보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만주를 포함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강자로 군림했던 고구려에 대한 자긍심과 오늘날 한반도 남쪽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결국 남한만의 분리된 정체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흐름의 중요한 원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

[표 11]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평가(단위 : %)

조사 시기	매우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편	자랑도, 부끄러움도 아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편	매우 부끄럽다	모름/무응답
2005	13.1	39.8	38.5	5.6	1.1	1.9
2010	10.7	51.6	34.3	2.6	0.4	0.4

[표 12] 역사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단위 : %)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모름/무응답
2005	3.0	33.7	2.6	6.4	8.2	3.9	9.1	24.6	8.5
2010	5.9	30.4	2.9	6.7	9.8	4.4	9.0	29.2	1.7

[표 13] 이분형 로지스틱 모델

구분	변인	B	Wald	Exp(B)
	상수	-0.16		
사회경제변수	연령	0.01	1.32	1.01
	성별 (남성)	-0.35 <sup>b</sup>	5.23	0.71
대한민국에 대한 분야별 자부심 정도	소득	-0.05	1.01	0.95
	학력	-0.23 <sup>a</sup>	8.29	0.79
	민주주의 성숙도	-0.33 <sup>b</sup>	6.21	0.72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위상	0.01	0.01	1.01
	경제적 성취	0.21	2.58	1.23
	사회보장 수준	0.19	2.52	1.21
	과학기술 수준	-0.31 <sup>b</sup>	4.80	0.73
	스포츠 수준	-0.13	0.94	0.88
	예술과 문화 수준	0.00	0.00	1.00
	군사력 수준	-0.09	0.52	0.92
	역사	0.22 <sup>c</sup>	3.16	1.24
	공정, 평등한 사회적 대우	0.08	0.34	1.08
	한국 국민의 국민성	0.15	1.32	1.17
	통계모형 평가	-2Log Likelihood = 1096.7	Nagelkerke R <sup>2</sup> = 0.09	

\* 주. 유의확률(P)에 있어 a는 P<0.05, b는 P<0.01 그리고 c는 P<0.001을 의미함.

종속변수 :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 1, 이전 국가들 0.

독립변수 : [대한민국에 대한 분야별 자부심 정도] 1-매우 자랑스럽다, 2-대체로 자랑스럽다, 3-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소득] 1-최저 가구소득... 11-최고 가구소득.

[학력] 1-최저학력... 6-최고학력.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이고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까. [표 13]은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이분형 로지스틱 모델의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집단(1)과, 고구려를 포함하는 다른 시대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집단(0)이다. 독립변수는 두 가지 범주의 변수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인구학적 변수로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이다. 또 다른 독립변수의 범주는 '대한민국에 대한 분야별 자부심의 정도'로 여기에는 민주주의 성숙도, 국제무대에서의 정

치적 위상, 경제적 성취, 사회보장 수준, 과학기술 수준, 스포츠 수준, 문화예술 수준, 군사력 수준, 역사, 공정·평등한 사회적 대우, 한국 국민의 국민성 등 모두 11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 결과 매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성이 확인되었다. 우선 인구학적인 범주에서는 성별,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남성보다는 여성 집단이, 고학력자들보다 저학력층으로 갈수록 대한민국을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연령이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대한민국에 대한 분야별 자부심의 정도' 범주에서는 민주주의 성숙도, 과학기술 수준 그리고 역사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인 것은 민주주의의 성숙도 그리고 과학기술 수준이 자랑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민주주의 성숙도의 의미는 더욱 특별할 수도 있다. 왕조였던 이전 역사와는 달리 대한민국만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채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역사' 변수는 그 관계의 방향이 다른 두 변수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이는 이전 역사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민족과 구분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혈연적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정체성보다 정치체제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행하고 권리를 누리는 시민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이 보다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혈연보다 국적의 중요성, 대한민국 내에 거주해야 하고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의 강조는 모두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앞서 살펴본 대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의 증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

국 민족주의'는 5년 전보다 더욱 뚜렷하게 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결론

모두(冒頭)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한 민족 한 국가라는 민족 국가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서로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은 남북한 간 통일이 이뤄진다면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분단과 단절은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분리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물론 혈연적 동질성이나 민족정체성이 전혀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낮아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의 분석이 보여주는 대로, 이제는 혈연적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정체성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가정체성이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민족 정체성과 분리된 국가정체성의 강화 추세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5년 전 조사 결과에 대해 “혈연에 기초한 막연하고 애매한 한민족, 한국인이라는 자기정의로부터,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근대적 속성을 함께 내포한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강원택 2006, 38)라고 요약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강화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의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민주주의의 성숙과 같은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풍요, 문화적 다양성이 갖춰지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남한만의 분리된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기준이 수용적이거나 관용적이기보다는 여전히 상당한 ‘주저함’이나 ‘유보적인 태도’ 등이 발견된다. 탈북자나 결혼이민자, 그 자녀에 대해서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국가정체성의 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포용성과 개방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강원택, 2006.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 대한민국 민족주의”.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 정치》, 강원택 편, 15-38.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 전재호, 2006. “세계화 시대 한국의 정체성 변화 : 국민 정체성의 법적 규정과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세계화, 국가, 시민사회 : 세계화, 정보화 시대 국가-시민사회와 정체성》, 손호철 편, 243-274. 서울 : 이매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2009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 〈연합뉴스〉, 2010. “탈북자 2만명 시대…의미와 과제”. 11월 15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5/201011150039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5/2010111500396.html)(검색일 : 2011.2. 20).